

‘위험천만’ 전동보장구 잇단 사고 법적으로 보행자 분류 ‘안전 시각’

노인·장애인 이용 전동휠체어 등
면허증·교육 필요없어 관리 안돼
인도 통행 불편에 도로 이용 잦아
광주·순천·곡성 등 교통사고 잦아
후미등·안전벨트 설치 등 보완 필요

광주·전남 지역에서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보행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의 전동보장구 활용이 늘고 있으나, 전동보장구는 법적 규제 미비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께 순천시 풍덕동 팔마대교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A(80)씨가 동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교령의 A씨가 전동휠체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일에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서 B(70)씨가 술을 마신채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 승강기 통로에 빠져 중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옆 편도 1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 70대 남성 도로를 역주행하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도 장성군 황동면 편도 1차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곡성군 석곡면 한 농로에서도 발길을 마치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던 C(여·82)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C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휠체어는 최대 속도가 시속 15km로 성인이 뛰는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무게가 100kg을 웃도는만큼 보행자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지난달 8일 광주지방법원은 곡성군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다 뒤에 앉아있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한 80대 D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총장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전동휠체어 후면에는 야간 추돌 사고 방지를 위한 LED 삼각 후미등이 설치돼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문가들은 전동보장구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필수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해 사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동보장구는 전동킥보드 등 PM과 유사한 형태지만, 현행법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별도의 면허증·안전교육 등이 필요 없다. 안전장치 설치 의무도 없으며,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 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려야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가 좁거나 연석이나 보도블록이 솟아오르는 등 주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다.

도로를 주행하는 노인들의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종표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반복되는 전동휠체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후미등과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헬멧이나 안전벨트 착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인도가 전동보장구가 통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어르신들이 도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자전거도로처럼 전동보장구 통행이 잦은 지역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보장구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분류되는 맹점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각 관도 도로에서 발생한 전동휠체어 교통사고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기초적인 사고통계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안전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전동휠체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전동휠체어에 후미등이 없거나 있어도 약한 불빛만 나와 어두운 시간대 좁은 시골길을 가는 전동휠체어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전동휠체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전동휠체어에 후미등이 없거나 있어도 약한 불빛만 나와 어두운 시간대 좁은 시골길을 가는 전동휠체어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전동휠체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특히 전동휠체어에 후미등이 없거나 있어도 약한 불빛만 나와 어두운 시간대 좁은 시골길을 가는 전동휠체어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운전자들이 뒤늦게 발견하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광주서 기초수급자 잇따라 ‘안타까운 고독사’

원룸서 50대·60대 숨진 채 발견

광주시 북구의 원룸에서 혼자 살던 50대와 60대 기초수급자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기초 수급자로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로 조사됐다.

앞서 24일 북구 풍향동의 한 원룸에서도 B(58)씨가 홀로 생활하다 숨졌다.

B씨의 장례는 풍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영장례로 치러질 계획이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망현장에서 범칙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화제의 판결

SNS 단체방에 공도 사범 비방 글 올리면?

특정지역 아닌 전국 동호인 방 게재...광주지법 “공익 아닌 명예훼손”

전국 동호인이 활동하는 여러 단체 대화방에 특정 지역 공도사범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까.

법원은 타 지역 동호인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동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과 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SNS 단체 대화방에 전남의 한 공도장 사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현직 사두(射頭, 활터를 관리·대표하는 우두머리)를 폭행했고 다수의 사원(활터의 회원)에게 욕설을 했던 인물로, 욕설과 폭언으로 과거 다른 사두를 그만두게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사

실은 있으나 B씨가 국공 사범 자격(3년 이상의 유단자·고결한 인품 등)을 갖췄는지를 질의하는 것”이라면서 “명예 훼손의 고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니는 공도장의 사원은 40~50명에 불과한데 글을 게시한 SNS단체 대화방 회원수는 3747명, 757명, 1047명이다.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호인에 불과한 SNS단체 대화방 회원에게 B씨의 사범자격 유무는 관심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주요 동기나 목적은 B씨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 훼손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NS 단체대화방은 사범 자격 유무를 심사·결정하는 단체가 아니다”면서 “게시글에는 B씨 뿐 아니라 부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방적인 비난에 불과하고 1심의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흥기에 찢린 부부...도대체 무슨 일이?

동광산 틀게이트 인근서 발견

지그재그 운행 후 가드레일 충돌

남편 숨지고 운전석 아내 중태

동광산 틀게이트 인근에서 흥기에 찢린 50대 부부가 발견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광산구 지족동 동광산 틀게이트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멈춰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조수석에 50대 남성 A씨, 운전석에서 여성 B씨가 흥기에 찢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의 영상은 꺼져 있고 차량 외 부품을 비추고 있어 사고 현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드레일을 충격하기 전에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서 흥기는 발견됐으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이들 부부는 이날 광주의 한 병원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펜싱 칼로 때리고 삼겹살 던져 화상 입힌 코치

아동학대 혐의 2심도 벌금형

전남의 한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관행대로 훈련을 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연선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 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련과정에서 올바른 동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펜싱 칼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때리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녁식사 도중 술에 취해 기름이 고여있는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학생들을 비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훈련을 하다 기대했던 자세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훈련지도 외 목적이나 감정으로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